

대선후보 건설, 주택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건설정책 및 규제 부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 영 덕 연구위원



An aerial, high-angle view of a city street intersection. The street is filled with cars, including several yellow taxis and a yellow bus. Pedestrians are visible on the sidewalks. Tall buildings line the streets, and the overall scene is captured in a slightly desaturated, blue-toned aesthetic.

Contents

01 / 19대 대선과 건설산업

02 / 분야별 건설정책 및 규제 분야 주요 공약 및 평가

03 / 건설산업 측면의 종합평가

19대 대선,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 인식 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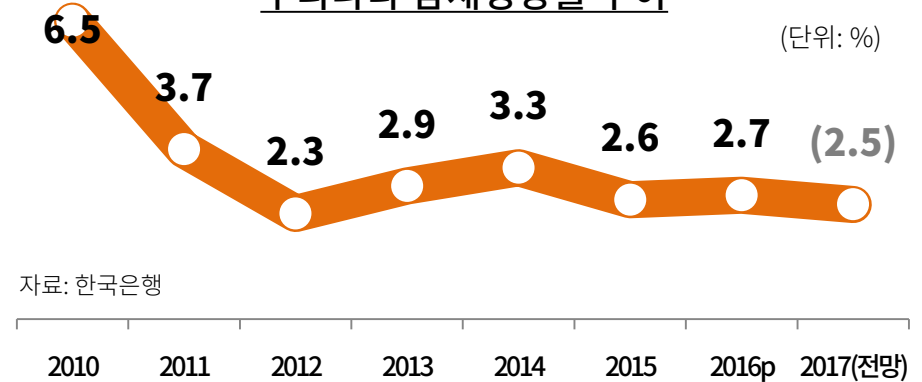
19대 대선이 있는 지금...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저하 심각

생산가능인구 감소·자본투자 감소

- 한국은행 : 공식적으로 3.0~3.2% 수준
- IMF와 민간연구소 : 2%대 진입, 2020년까지 1%대 하락 우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이



일자리 부족 심화 및 소득 개선 요원...

-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고용증가율 **10% 불과**(2007~16)
- 실업자 수 **130만명**, 역대 최대치(2017.2)
- 2016년 국민총소득 **27.561달러**
(박근혜 정부 “4만 달러 시대” → “2만 달러의 늪”)

미래에 대한 대비 수준은?

- 우리나라 4차산업 혁명 대비 수준 : **세계 25위**

국 가	순 위
스위스	1위
싱가포르	2위
일본	7위
대만	10위
한국	25위

자료: WEF(2016)

대선 후보들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한 목소리...



“출퇴근 편하게, 교통비 가볍게”
“사람 중심 경제”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
“안전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서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당당한 서민 대통령”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습니다”
“2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일자리”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처한 모델국가”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나라”

“경제위기를 막아내는 대수술을 하는 의사”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 저성장 극복”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민생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사회상속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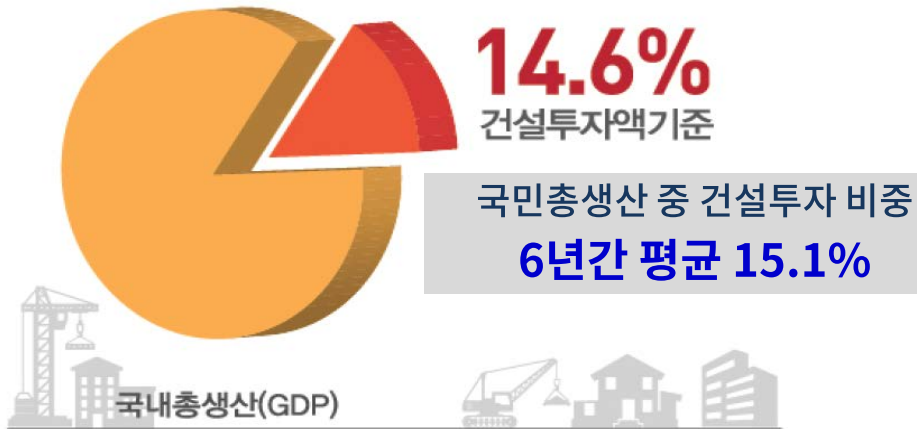
정의당
심상정



왜 건설산업인가? :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핵심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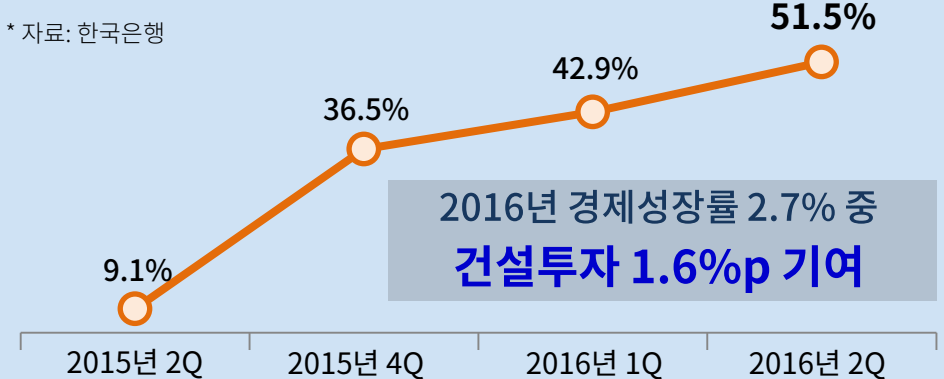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



건설투자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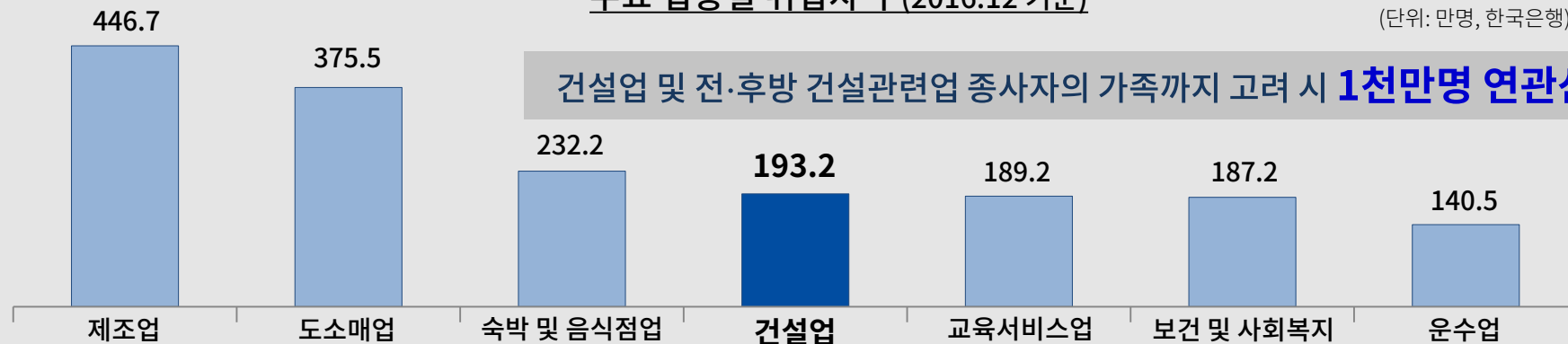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산업별 취업자 수 4번째에 위치 : 산업과 연관된 국민 多

주요 업종별 취업자 수(2016.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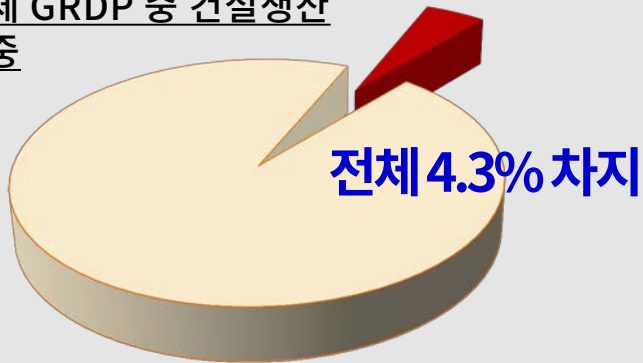
(단위: 만명, 한국은행)



왜 건설산업인가? :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우선 고려 필요

지역경제일수록 성장이나 고용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체 GRDP 중 건설생산
비중



제주도 9.3%(지역 내 산업별 순위 2위)
강원도 8.9%(지역 내 산업별 순위 2위)
경상남도 6.5%(지역 내 산업별 순위 3위)
⋮

왜 선진국들은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찾는가?



European Commission
Investment Plan for
Europe (Junker Plan),
2014
- EU 인프라에 3년(2015-
2017)간 3,150억 유로
투자



국토강인화(國土強忍化) 계획,
2013
- 10년(2014-2023)간 ¥ 20조엔

제4차 사회자본 정비 중점계획
(2015-2020), 2015

21C 인프라 정비사업, 2016



Transport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TIFIA), 2010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FAST Act), 2015
- 5년(2016-2020)간 \$ 3,05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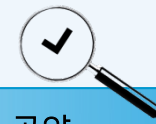
Donald Trump, 2016
- 10년간 인프라에 \$1 조 달러 투자



SOC 예산·인프라 투자

- 재정확대에는 모두 동의, 그러나,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는 SOC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낮게 책정

<div>다불어민주당</div> <div>문재인</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재정지원 사업 원점 재검토 중복, 비효율, 불투명한 재정집행의 근절 재정집행의 성과계약제도 중심 	<div>자유한국당</div> <div>홍준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예산 제로 베이스 재검토 세출 구조 조정 공공부문 재정지출 구조조정
<div>국민의당</div> <div>안철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출조정을 통한 예산 낭비 방지 대규모 재정투입정책 부정적 재정지출의 효율성 증대 	<div>대선 정당</div> <div>유승민</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출 구조 조정 및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 재정지출만 확대하는 경기처방은 재정 건전성 악화
<div>정의당</div> <div>심상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송법」 제정 대규모 예산사업 분야별 지출순위 '국민 참여 예산제' 도입 국가 재정운용의 신뢰성 제고 	



SOC 예산·인프라 투자



- 신규 SOC사업 보다는 **대부분 기존 공약이나 검토 혹은 지연 사업 중심...**

다불어민주당

문재인

-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
- 스마트 도시
- 세종-서울 고속도로 / 울산
- 대구공항 이전 /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화
- 대구권 광역철도 / 장항선 복선 전철화 /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부산 북항 재개발 / 광양항 개발

자유한국당

홍준표

- 광역 중수도 설치 확대 및 식수댐 설치
- 정부 지원 6개 거점 마리아 항만 사업
- 동서평화고속도로 / 무주-대구고속도로 / 목포-부산 고속도로 등
- 제주신항만, 인천내항재개발 등
- 김해 신공항 / 제주 제2공항 조기 추진
- 인천발 KTX / 영호남 연결 고속화철도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 여주 원주 철도 복선화 등
- 영종도-청라 간 제3연륙교 등

국민의당

안철수

- 중부권 동서내륙횡단철도 / 제천-삼척간 ITX 철도건설 / 김천-거제 KTX / 장항선 복선전철화
-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확장
- 김해신공항 추진(교통망 확충 포함) / 제주 제2공항 / 청주공항 인프라 확충 / 군 공항 이전 사업
- 충북 바이오밸리 조성 / 광주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II 부문별 건설정책 및 규제 분야 공약



SOC 예산·인프라 부문 주요 공약



SOC 예산·인프라 투자



바른정당

유승민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 KTX·GTX/ 경인선 지하화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 대구공항 이전

정의당

심상정

- 친환경 그린스쿨
- 철원 평화공단 조성 / 비무장지대 평화 생태 허브 조성
- 영일만 신항 개발 / 해수유통 조력발전
- 오송-충주-제천 바이오산업 벨트 / 판교 등 첨단 테크노벨리 조성



국민 안전 및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도시재생 및 노후 인프라 정비**에는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 매년 10조원대의 공적 자원 투입
- 매년 100개 동네씩 총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재생
- 젠트리피케이션 대비
- 매년 39만개의 일자리 창출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제 살리기 뉴딜플랜」

- “노후 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
- 총리실 산하 ‘공공인프라 개선 기획단’ 설치
- 제1차 5개년 계획 추진에 50조원 예산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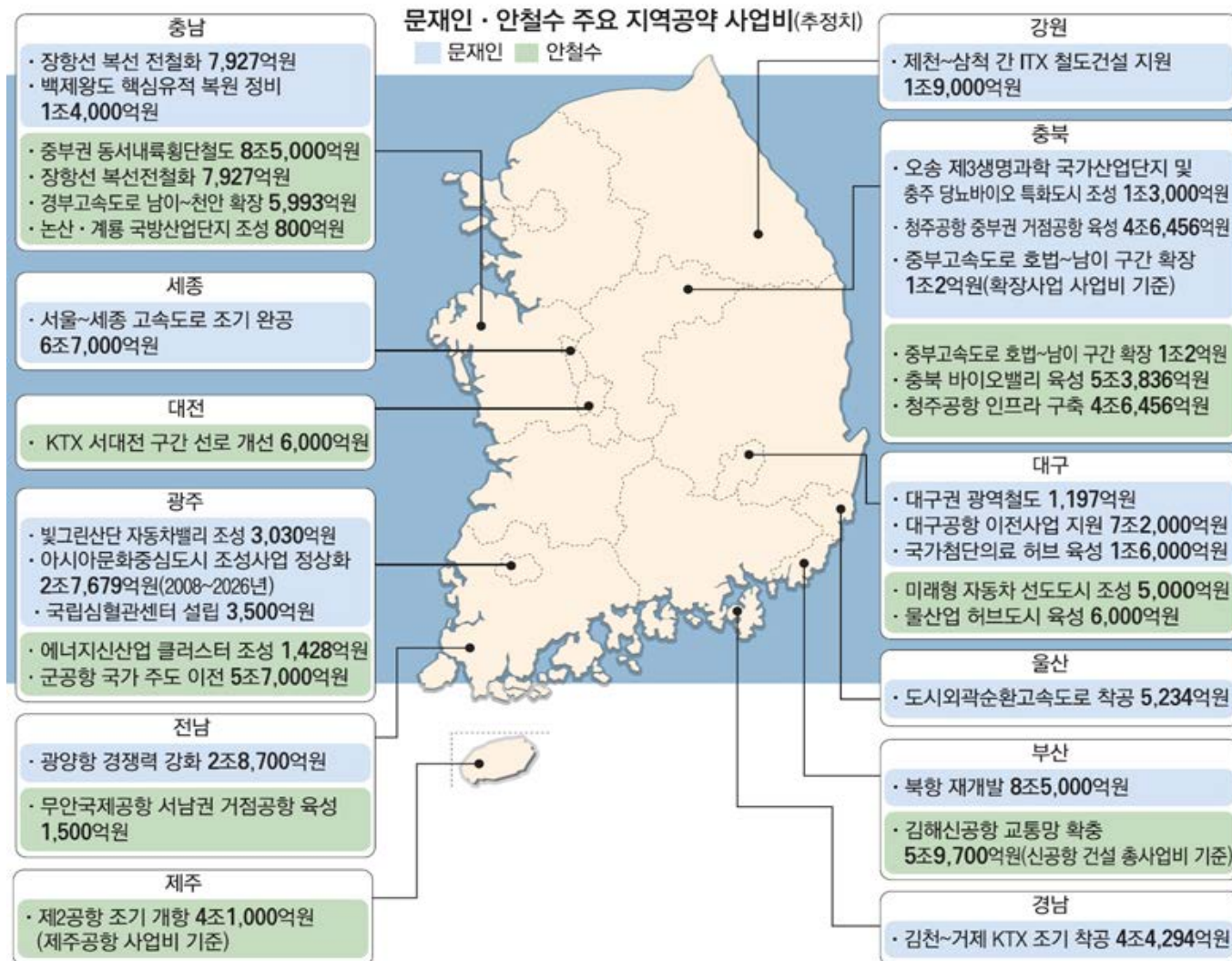


SOC 예산·인프라 투자



후보들의 지역별 SOC 사업들 대부분 **구체성 및 실현성 제시 미흡**

- 동서내륙횡단철도 8.5조원, 대구공항 이전사업 7.2조원, 충북 바이오벨리 5.4조원 등...
- 후보들의 지역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SOC 사업, **기존에 논쟁이 심하거나 경제성 문제로 보류되었던 사업** 중심
- 이들 사업이 **지역 숙원사업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큰 사업**들을 감안 필요
- 보다 구체성 있고, 재원조달 등 실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에는 미흡





SOC 예산·인프라 투자



공약 중 사회복지, 교육, 국방 분야 등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인프라 투자 여력 부족 우려**

- 많은 사회복지, 교육, 국방 분야의 공약들로 인해 인프라 투자 여력은 크게 위축 전망
- 대부분 후보들이 SOC 사업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에는 부정적 의견 피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 되풀이할
이유 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낮고, 사회적 비효율 초래...”



노후 인프라 및 지역별 구도심 활력 제고 문제는 향후 우리 경제의 핵심 이슈

- 후보들이 **노후 인프라 정비 및 도시재생 등에 높은 관심은 매우 긍정적**
- 다만, 후보들의 **임기 내에 완료한다는 무리한 목표 보다는 중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의 핵심과제로 인식**,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확보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 고려 필요





산업 생산구조 분야

- 직접적인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공약은 아니나, **대부분의 후보들이 하도급 정책 및 대·중소 기업간 불공정 근절 공약 포함**
-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통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중심...

다불어민주당

문재인

-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및 연대보증제도 폐지
- 갑질 횡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자유한국당

홍준표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 과징금 누진제
- 의무고발요청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국민의당

안철수

-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 공정위 권한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바른정당

유승민

- 「공정거래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정의당

심상정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상 위반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강화
- 초과이익공유제 → 노동자 임금인상



산업 생산구조 분야



생산체계가 복잡한 건설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의 **일방적 확대 문제 있어...**

-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는 원사업자-협력업자-2차 협력업자(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간의 개별적 계약에 기초
→ 한 건의 건설사업에 수많은 계약과 거래가 발생
- 다양한 거래 관계 속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이 많아 건설생산활동 자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 우려
- 건설분야의 경우,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과징금’제도가 많고, 「하도급법」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 → **일반법 형태로 도입 시 기존 형벌, 행정제재와 과도한 중복적인 처벌 발생 우려**
- 우리나라는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다는 점**에서 **충분한 법적인 검토 없는 도입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소송에 몸살’...10대 건설사 피소액 3조원 넘어

구 분	H건설	S건설	D건설	G건설	S건설
피소건수	188건	133건	118건	121건	78건
소송가액	5,577억원	6,666억원	5,773억원	3,840억원	3,614억원

* 자료: 뉴스1(2017.4.11)

[2016년 건설분쟁 중재 현황]

역대 최대인 131건,
신청금액
1조 8,259억원



산업 생산구조 분야



산업 생태의 질적인 개선은 “협력과 신뢰”, 실질적인 상생을 유도하는 공약 전무(全無)해

- 현행 각 후보들의 공약은 분쟁이나 실제 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인 제재를 언급
☞ 사후적인 제재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는 근본적인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담보 불가능
- 제재제도는 원사업자-협력업자-2차 협력업자 간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고려될 때
실효성 확보 가능



공정위 권한 강화 및 전속 고발권 폐지 신중 필요

- 대다수 후보가 공정위 권한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 → 불공정 관행 적발 및 처벌...
- 공정위는 지금도 현장조사권, 자료영치권 등 검찰 못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
- 공정위는 대표적인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기관으로서 권한 강화는 기업의 투자 활동과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
- 전속 고발권 폐지 시, 가뜰이나 분쟁이 심한 건설산업의 경우 소송 남발 우려
☞ 결국 중소기업 피해만 발생 가능



기업 정책 분야



- 지금까지 발표된 공약에서 나타난 후보들의 기업 관련 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 → **“중소기업 활성화”**와 **“대기업 중심 체제 개혁”**, 해법은 한결 같이 **정부조직 강화** 및 **대기업 지배구조 제재 중심**

다불어민주당

문재인

- 상법 개정
- 다중대표소송제 /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 노동자 추천이사제
-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 구성
- 지주회사 요건 강화

국민의당

안철수

- 다중대표소송제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 재벌 지배구조 통제 강화
- 일감몰아주기 제재
-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개선 명령 도입
- 창업중소기업부 설치

자유한국당

홍준표

- 다중대표소송제 / 전자투표제
-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준 강화
-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R&D 10조원)
- 중소기업부 신설
-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바른미래당

유승민

- 일감 몰아주기 개인회사 설립 금지
- 중소기업청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중소기업 특허 등 지식재산권 법인세 감면

정의당

심상정

-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 5년 내 정규직 고용 80%로 상향
- 중소상공인부 신설



기업 정책 분야



중소기업의 육성은 정부조직 강화보다는 실효성 있는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

-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조직의 강화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항
☞ **중소기업 전담 조직의 강화는 중소기업 정책의 단골 메뉴**
- 박근혜 정부 시기에 약 10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육성책 예산이 편성, 집행해 왔으나 실효성은 의문...
- 정부조직을 강화하는 것보다 실효성 있는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이 우선



대기업-중소기업 이분법적 대응 공약 外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기업정책 공약 없어...

- 국가경제를 위한 기업정책의 방향의 편협성
☞ **실질적인“균형”정책이 아닌“성장”이라는 핵심 담론은 제외된 강제 배분성 공약**
- 기업 친화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약은 전무해...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
- 상법 개정, 지배구조 제한 공약 등은 논란 야기 예상



일자리 정책·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적인 공약 제시 주력 → 수단으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근로시간 등 근로 관행 개선 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5년간 21조원 투입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 전기차, 인공지능 기술분야 지원
- 창업국가 조성
- 공공기관 5% 청년고용할당제
- 민간 규모별 청년의무고용할당제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 비정규직 격차 해소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자유한국당

홍준표

- 공공부문 구조조정 → 일자리 창출
- 민간주도 일자리 유도 → 기업에 정부 예산 보조, 조세감면
- 청년 일자리 뉴딜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 벤처기업 적극 육성
-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28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 파견 근로자 참여제도
- 노동관행 혁파 등 고용 유연화

국민의당

안철수

- 제조업 4차 산업혁명
- 국가기술융합센터 설립
- AI 등 신성장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 국가연구개발체계 전면혁신
-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

-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 “창업드림랜드” 조성
- 5년 한시적 청년고용보장계획: 중기 청년 2년간 1,200만원 지급, 구직청년 6개월 180만원 훈련수당 지급
-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 비정규직 남용 기업체 불이익 불과



일자리 정책·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일자리 정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향후 지속성과 정책의 질 모두 낮은 수준

- 공공·민간부문에 일방적으로 의존한 단기적 일자리 양적 확대는 지속성 측면에서 현저히 낮게 평가
- 청년의무고용제, 근로시간 단축, 국가의 한시적 고용 부담 등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중소기업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약, 성장동력으로서의 구체적인 비전제시 없어...

-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기업, 경제, 일자리 등 다양한 공약에서 명시.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경제와 산업의 비전 제시 미흡**
- ‘세계 각국의 4차 산업기술을 모은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4차 산업혁명인재 10만 양성’등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각론 구체성 결여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의 대응에 있어 핵심인 산업 발전 정책 공약 없어...

- 제조업, 건설업 등 구체적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산업 발전차원의 공약이 없어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나 4차 산업혁명의 대응 해법 의문



산업 규제개혁 분야

-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규제개혁을 강조,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div>더불어민주당</div> <div>문재인</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 신산업 분야네거티브 규제/일몰제 도입 	<div>자유한국당</div> <div>홍준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비용 관리제/ 규제 샌드박스 등 적극적 규제 완화 작은 정부 강성귀족노조의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 등 고용 유연화
<div>국민의당</div> <div>안철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구조 개혁 → 자율성 확대 규제프리존 찬성 네거티브 규제 도입 	
<div>바른정당</div> <div>유승민</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거티브 규제 도입 규제개혁 대통령 직접 추진 혁신부총리 신설 	<div>정의당</div> <div>심상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관계 개혁



지금까지의 공약을 종합하면, **규제의 완화 혹은 폐지 보다**는 일자리 창출, 경제 및 부동산 분야, 중소기업·기업 등 부문 공약 대부분이 **규제 강화에 초점**



산업 규제개혁 분야



규제 완화 없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공약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 일자리 창출** 등은 사실상은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일자리의 창출 범위도 한정적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의 문제는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우선적 고려 필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건설산업이 가장 큰 피해**

- 모든 후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기업 지배구조 및 자회사 등에 대한 규제, 생산구조 및 노사관계에 대한 규제 강화 언급
- 건설시장 활성화, 건설기업 경영 및 생산 등 **건설산업 전반의 활동에 있어 부정적 영향 우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긍정적, 그러나 **규제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제시 없어...**

-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1968년 무역 규제에 도입된 이래, 과거 규제개혁 활동에서도 지속 논의
- 실제 기업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 체계 및 개별 규제 전면적 재검토 필요
- 규제의 실질적 완화 혹은 폐지



기타 건설제도 관련 공약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

※주요내용 : 건설노동자 임금보장 법제화(법정임금과 8시간 노동 보장)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주요내용 : 최소 75% 직접시공 의무화, 직접시공률 높은 업체 입찰제도 우대



해외 건설을 통한 청년 일자리 지원

※주요내용 :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 설립, 해외 파견 청년 훈련비 추가 지원 확대, 현장연수 청년·저소득층 우선 선발, 해외건설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간소화

※주요내용 : 지역 핵심사업은 경제성보다 정책성 반영비율 확대로 Fast-track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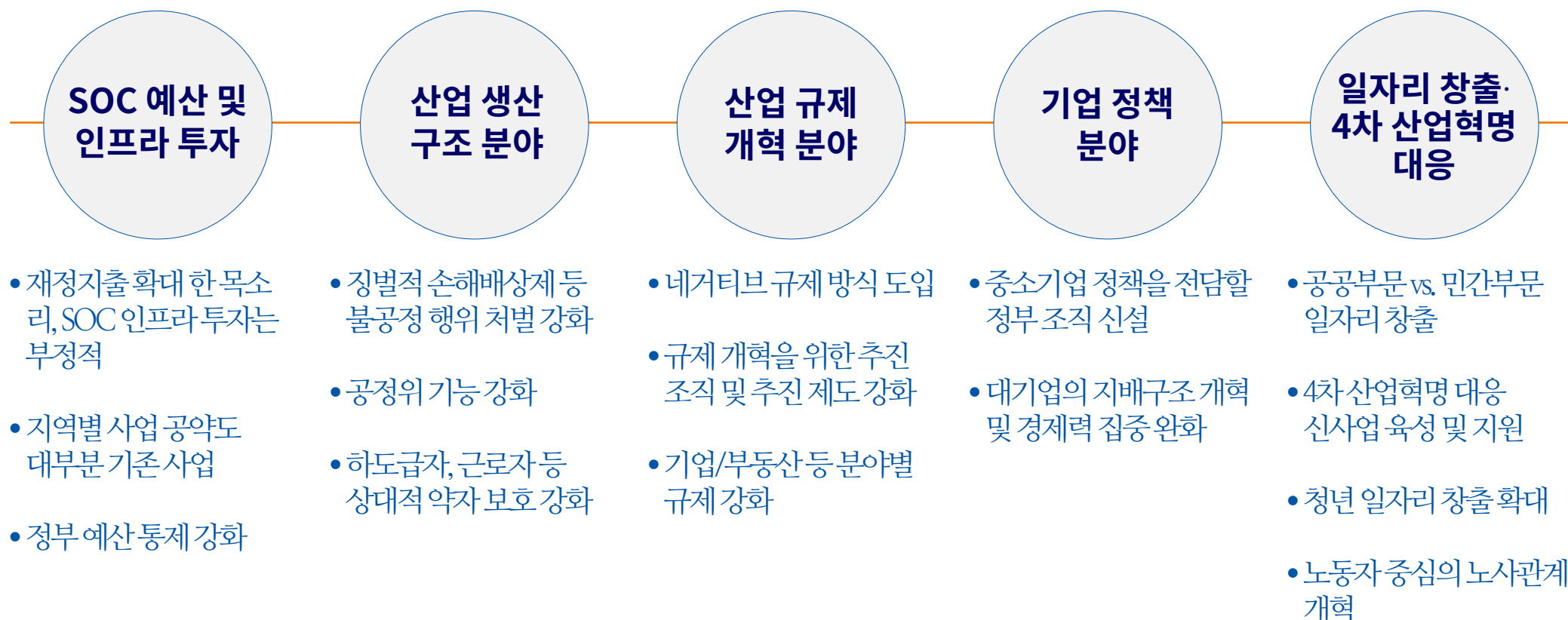


- 적정임금제 도입은 건설기능인력의 등급체계 구축 및 이력관리 등 선결 필수적
- 현행 건설업 면허체계와 사업규모나 공종별 특성을 고려치 않은 직접시공비율의 일괄 설정은 사업효율성 저하 등 문제 발생
- 해외건설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세부 내용은 기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과제



종합 평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포퓰리즘 공약이 많아 구체성과 실현성 낮아





1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핵심 산업인 건설산업 공약 미흡

-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건설산업에 대한 공약 발굴 미흡

2

재정지출의 성과가 우수한 인프라 투자 위축 우려

- 대부분의 후보들이 SOC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 →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낮게 책정 우려

3

획일적 하도급자(근로자) 보호 및 처벌 중심의 정책은 건설산업 발전 저해

- 「징벌적 손해 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은 분쟁이 많고, 과도한 행정제제의 건설산업 비효율 증대 우려

4

각종 공약의 지나친 규제 양산은 규제의 요람인 건설산업의 더 큰 위축 야기

- 산업적 특성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의 양산은 건설산업 등 중추 산업의 위축 야기

5

제조업, 건설업 등 중추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의 부재

- 실질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는 국가의 핵심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은 전무(全無)



분야별 건설산업 측면의 제언

SOC 예산 및 인프라 투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수 (※ 건산연 보고서, 경제성장을 3% 유지를 위해 50조 인프라 추가 투자 필요) •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숙원 인프라 사업 조속 추진 필요
산업 생산구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내 갈등 야기하고 생산성 개선 유인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업역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 • 복잡다기한 건설 관련 업종의 통·폐합과 경직적 진입규제 개선
기업 정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핵심 산업인 지역 중소건설업 육성책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공약으로 고려 필요 • 중소건설업 육성에 있어 산업별 차별화된 육성 프로그램의 마련, 운용 필요
일자리 정책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 시급 • 건설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융·복합 촉진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건설 발주제도 혁신이 우선
산업 규제개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의 구조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건설분야의 규제개혁 필요 • 일관된 건설규제개혁과 혁신을 위해 국가 차원의 건설혁신기구 필요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